

# 정보통신 관련분야 외자 42억달러 유치 추진

정부는 구조개혁의 핵심수단인 정보화를 촉진하고 정보통신산업을 육성시켜 경제위기 극복과 IMF 이후를 대비할 수 있도록 앞으로 정보통신분야 투자를 크게 늘리기로 했다.

이를위해 정부는 지난달 21일에 개최한 제1차 정보화전략회의에서 경제회생을 위한 국가정보화 촉진방안등 주요 쟁점사항과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개최된 정보화전략회의는 최근 5년동안 3번밖에 열리지 않아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온 정보화추진확대회의를 폐지하고 국민정부들어 새로운 방식으로 처음 개최한 것이다.

이번 정보화전략회의에서는 ▲정보통신부-경제회생을 위한 정보화 촉진과 정보통신 산업 육성 ▲행정자치부-공공부문 구조개혁을 위한 전자정부 구현 ▲기획예산위원회-공공부문 정보자원관리 개선방안을 각각 보고했다.

정부는 이같은 정보화 추진방향에 대해 단기적으로 현재의 경제위기 상황을 조기에 극복하고 장기적으로 21세기 지식정보사회의 기틀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해법을 정보화 촉진과 정보통신산업 육성에서 찾겠다는 것이다. 즉, 정보화가 우리경제와 사회의 누적된 고비용 구조를 개선하고 효율을 극대화하는 경제구조 개혁의 가장 핵심적인 수단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정보통신산업은 90년대 이후 우리경제의 성장고용 및 수출과 물가안정에

크게 기여했으며 세계적 성장산업이며 우리기술로도 경쟁이 가능한 분야이기 때문에 전략적 육성이 필요하다는 것.

미국의 경우 정보기술 활용을 극대화함으로써 지난 5년간 연방 공무원의 16%에 달하는 35만명을 감축하고 1,370억달러의 예산을 절감하면서도 행정서비스 수준은 향상되는 성과를 거뒀다. 정부의 정보화 투자는 그동안 꾸준히 증대해왔으나 IMF체제이후 급속히 위축되고 있다.

중앙부처 전산 및 초고속사업 예산을 보면 작년에 6,537억원으로 전년 대비 31.5% 증가했으나 올해는 6,539억원으로 증가세가 멈췄다. 공공부문 정보화 투자 위축으로 올해 시스템 통합산업의 매출액도 작년의 4조 8,520억원에서 올해는 4조 863억원으로 15.8%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배순훈 정보통신부 장관은 김대통령에게 보고한 정보화 촉진 및 정보통신산업 육성방안에서 세계화 전략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분야에서 내년까지 2년간 42억달러의 외자유치를 추진하겠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정부가 구분한 외국인 투자형태는 대체로 3가지 유형이다. 우선 다국적 기업이 아시아권 생산기지 건설을 위해 국내 자회사에 투자하는 것으로 미국의 모토로라가 이에 해당된다. 또한 선진국 통신사업자가 국내 통신사업자의 경영에 참여할 목적으로 투자하는 것으로 한솔PCS의 주식취득과 경영참여를 위

해 1억 8천만달러 투자를 추진중인 캐나다 BCI사가 꼽힌다. 또다른 형태는 선진국 기관투자가가 단순투자 목적으로 주식을 매입하는 것으로 SK텔레콤에 지분참여한 미국 타이거펀드가 해당된다.

정부는 투자형태에 맞는 차별화된 지원으로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내년에 세계적 통신사업자의 국내진출 이전에 국내사업자의 자율적 구조조정을 유도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어서 향후 국내 유무선 통신사업자들의 움직임이 주목된다.

정통부는 이날 정보통신산업의 수축 확대 방안으로 반도체 이후의 수출유망 품목을 선정해 제시했다. 해당품목은 이동통신 단말기를 비롯해 고속모뎀, 평판디스플레이, 광디스크드라이브, 위성방송수신, 셋탑박스, 인텔리전트TV 등이다. 이밖에 세계에서 컴퓨터를 제일 잘 쓰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유아부터 노령자를 대상으로 2002년까지 약 2,500만명의 국민에게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겠다는 계획도 제시됐다.

정부는 정보화전략회의의 성격을 단순한 보고회의나 정보화사업 전반에 관한 심의에 그치지 않고 정보화와 관련한 주요쟁점사항이나 정책조정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정보화전략회의는 분기별 1회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고 관계장관과 민간 전문가를 참석토록 해 실질적인 토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운영할 방침이다.